

### ●유기농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문제 대부분 해결될 전망

◆업계 숙원인 부가세 영세율 문제가 11월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고 대부분 주요자재는 12월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친농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농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왔으나, 기재부는 세수감소를 우려 소극적 태도로 일관 처리를 미뤄와 농민신문 등에 10여건이 보도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광림의원 등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월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키로 기획재정부 세법 소위에서 약속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극히 일부 제외 주요 유기농자재는 내년부터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적용안 : 제충국, 님, 데리스, 고삼 등 천연식물추출물 및 그 제제, 규산나트륨·염, 중탄산나트륨, 석고암석, 점토광물 등 천연광물 및 그 용액, 미생물 및 그 추출물, 토탄,이탄,풀빅산,휴믹산 등 Peat 추출물 및 그 용액, 구아노, 깃털분, 해조분말, 숯, 동식물성오일 등 동식물성 부산추출물 및 해조류 추출물과 그 제제,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아연·칼슘·마그네슘, 인산철 등 미량원소 및 그 용액, 황·구리·염

### (관련보도기사 ; 한국농정신문)친환경농업 첫 장애물, 유기농자재 부가세



◆친환경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 중 첫 번째인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다.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부터 걷어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친환경농업 육성구호는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목소리는 첫째, 비싼 유기농자재 비용은 가계에 부담이 커 영세율적용이 시급하다. 둘째,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받을 정도로 친환경이 위축돼 웬만한 각오 없이는 안 된다. 셋째, 친환경농사 짓는 보람이 없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기재부부가가치세제과 류양훈 과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유기농자재 영세율 추가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국감에서 국회 요구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신중한 적용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수입비료 위해성검사강화, 규제위주 비료관리법령 개정**

-농식품부는 모든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중이다. 규제위주의 법령개정이다. 또한 동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비료관리사무를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농식품부 위임 사무를 이관할 예정이어서 유기농자재에 이어 또 파란이 예고된다-

(개정안 주요골자)

**가. 무상 유통·공급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상 공급비료가 토양 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공급 비료도 공정규격 준수, 수입 무상공급도 수입업 신고를 하도록 함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

○유기질, 부산물비료만 수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환경 오염 우려가 있어, 업자가 6개월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지위승계 제도도입**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유기농업자재 공시+인증제 통합, 효과자율표시, 개선인가 개약인가?**

**-친환경농업육성법 국회의결(11.17) 및 '17. 6월 18일 시행예정-**

\* 품질인증제도 폐지 공시제로 일원화, 해당자재의 효능·효과표시 성적서첨부 자율표시, 기존 공시·품질인증 제품은 유예기간 3년 부여 경과조치

\* 개별 병해충에 대한 방제효과 및 작물생육 부위별 효과 등을 표시토록하여 농가 선택폭을 넓히고, 업체 자율의 공시제품의 품질을 자가보증토록 허용

## ● 기타 개정된 친환경육성법 조항

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의 강화(제20조) : 2회 이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신청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강화(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인증심사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추가,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경우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도 3년간 제한.

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인증기관의 평가 등(제32조) 인증기관 지정 취소시 재 지정 제한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인증기관 운영평가 등급 평가 지원 등 반영

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제53조)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 공시인증을 받은 사업자,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 정보 제공

## ● 향후 추진계획(농식품부)

### ◆효능·효과 심사기준 및 표시안 마련(17년 1월)

(현행) 품질인증(증수 15%, 방제 60%)만 표시 → (개선) 모든 제품에 병해충 및 작물생육 효과를 표시(임의)하고, 책임보험 가입후 자율표시 가능

○식물시험(효과 및 피해·약해)에 대한 검증방법과 시험포장수 기준마련

(현행 : 신규 2, 변경 1) 및 최저 효과기준 마련

○ (표시) 병해충 자재 효과 표시방법(개별표시 또는 상·중·하) 검토

(예시) 병해충관리용 : 진딧물 70%, 나방류 50%

토양개량·작물생육용 : 염농도저하, 토양물리성개선, 뿌리활착, 과수 착색 등

### ◆유기농업자재 업무 농관원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 농식품부(농관원)는 제도운영, 민간인증기관 및 공시기관 관리, 인증·공시품 사후관리 등 담당, 농산물인증은 민간인증기관, 민간공시기관과 제도간 협력

○ 이관 후속조치

-자재업계, 공시기관, 친환경단체, 농진청, 농관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 협의회를 통해 세부관리방안 마련 \*이관에 따른 농진청 인력(2명)을 농관원으로 이관?

-자재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실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Pool 구성 운영 등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관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대응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진청 고시)」중 일부개정

시행규칙 별표17 개정에 따른 고시로 종전과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 업무이관에 따라 '17년 1월 농관원에서 이를 포함 공시기준 등 전부를 재 고시할 예정이다.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별표 2)

- 표시사항은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용기나 포장의 뒷면에 표시(뒷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 별도 표기 위치를 표시하고 여백에 표시)
- 표시사항 중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시행규칙」별표 17)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번호 : 유기농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 유기농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 유기농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
- 제조(수입)일자 : 해당 제품 제조한 연월일을 표시, 수입제품은 원 제조업체 제조일자 표시
- 유통기간 : 제조일자(수입제품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기산일로 정하여 유통기간을 산정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생략가능(다만, 비료로 등록된 제품 중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표시)
-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
-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 해당 제품을 사용·보관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동물의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
-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유기농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표시

### ◎외래해충유입방지 검역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

지난 11.17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외래해충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래병해충(병 38종, 해충 44종, 잡초 227종) 중 1995년 이후에 유입된 병해충·잡초만도 66종이나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유기농산물 퇴비사용기준과 공시기준의 퇴비기준 상이 혼선

-지난달 17일 농관원에서 개정고시한 “유기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 재배방법중 가축분뇨 퇴비사용기준중 “퇴비화 과정에서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5회이상 뒤집어야 함”이 삭제됨에 따라 유기농자재 공시기준과 달라 향후 가축분퇴비 공시 검토시 논란이 우려된다-

◆ **개정 조문**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유해 성분함량은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2016년도 친환경비료 사업 평가

지난 11.14일, 농식품부는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시도, 시군구, 농협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비료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결과 18개 기관, 18명의 유공자가 수상자로 선정, 친환경비료 우수 시도' 평가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상 받아 내년도 시도별 유기질비료지원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등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 ◎ 농협, 내년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 값싸게 공급...업계 반발

-농협, 품질관리 강화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 내년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가 올해보다 더욱 저렴하게 공급되고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 업계는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유기질비료 공급권한도 없으면서 “화학비료 과당경쟁을 유발 올려겨자먹기식 가격인하 방식”을 영세한 유기질비료업계에도 적용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화학비료업체들의 유기질비료업 진입, 업체 난립 과당경쟁 등으로 급격히 유기질비료 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농협이 적정 이윤을 보장 산업계도 육성하면서 가격, 품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 정부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 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읍·면·동 등 각 행정기관을 통해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유기질비료 106곳과 퇴비 416곳 등 모두 522곳이다.

▲특히 고품질 친환경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힘쓴 결과 농가 부담 경감액은 20kg들이 한포대당 평균 유기질비료 235원, 퇴비 30원 등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2017년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사업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농가에 공급된 퇴비 중 수분함량이 높고 악취가 나는 등 불량 퇴비에 대해서는 농진청이나 시·군농기센터, 지자체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 이후 품질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운영하는 현장컨설턴트를 통해 농가에 공급된 퇴비의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수분·부숙도 검사 등 현장 품질검사 정례화로 공급단계에서 업체 경각심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정품·정량 퇴비공급에도 힘쓸 계획이다(11.9농민신문)

### ● ‘친환경농업발전 워크숍’ 개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발전 워크숍’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지난 15~16일 걸쳐 예산에서 열렸다.

▲워크숍에선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및 기반구축 유공자,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친환경 부문 우수상 등 19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으며, 농식품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추진 방향발표와 △친환경농업 생산확대 방안 △가공·유통 효율화 방안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대한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 ●친환경농민단체, 정부에 친환경농업 육성·친환경쌀 가격보장 촉구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민단체와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정부에 “친환경 쌀값 보장 및 친환경농업 육성의지 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농연, 친농연 등 농민단체와 김현권 의원은 정부에 친환경 쌀값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 등을 촉구했다.

친농연은 “쌀값 폭락 문제는 친환경 쌀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쌀값이 무너지면 쌀 농가가 망한다. 농민이 망하면 식량주권을 잃고 나라가 망한다.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농업을 사실상 손 놓다시피 한 정부를 규탄했다. “올해 초 저농약 인증제 폐지뒤부터 제초제 사용량이 늘었고, 친환경농업 지표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친환경농사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고려 없이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했다”며 비판했다.

## ◎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점 토론

지난달 31일, 경기도 학교급식 운동 관련 단체대표들은 수원 경기도청 연정 부지사실에서 경기도 지역의 학교급식 제도 개선 현안(4가지) 토론이 있었다.

첫째,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통합적 급식관리 체계를 확보하자  
둘째, 학교급식용 쌀 가격을 보장하라. 올해 경기도 친환경쌀 예상 생산량은 무농약 1만톤, 유기농 4,000톤이다. 셋째,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필요예산을 경기도가 100% 책임져야 한다. 넷째,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퇴출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연석회의 측과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 ◎애매한 친환경 인증기준, 저수지 관리소홀로 인증 취소

지난달 2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지적된 저수지 관리 문제로, 이개호 의원은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인근 친환경 농가들 중 일부가 인증 취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차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소홀 문제도 있지만, 체계화되지 않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저수지 상황에 따라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안 내주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미 대통령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쇠고기 수입월령 완화·쌀 TRQ물량 확대 요구 전망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환율에 민감한 사료업계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의 당선이 원-달러 환율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

## ◎"축하화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공직사회 5만원 이하도 괜한 오해살까봐 거절, 연말 승진인사철 화훼업계 먹구름, 김영란법 가장 타격 큰 회회 도소매업 붕괴 초읽기-

꽃배달 업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50% 감소했다"며 "특히 잔뜩 움츠러 든 공무원들이 5만원 이하 화분마저 거부하고 있어 생계 자체가 걱정"이라 한다. 실제로 작년 1조2천억원이었던 화훼업계 총 매출이 청탁 금지법으로 올 8천억원에 머물 것이란 화훼업계의 추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식사는 커녕 면담거절 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봉준 투쟁단, 동학혁명 당시 정신결기 그대로 "가자, 청와대로!"**  
**"쌀값 이전에 이견 나라가 아니라서 나왔다"**

-행진4일째, 수십여대 트랙터 앞세우고 전북 고창정을 순회, 서울 진입마찰



"불의한 정권 향한 강력한 경고" 지난 15일 전남 해남에서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로! 농기계 투쟁 출정식'을 갖고 출발한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이 행진 4일째인 18일 수십여대의 트랙터를 앞세우고 정읍시의 각 면 소재지를 순회한 뒤 정읍시청에 모여 있다((11.19 한국농정신문)

**◎ 배추좀나방 · 비래애벌레 약제 저항성 발생**

지난 10월 21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 된 한국응용곤충학회에서 서울대 권덕호 교수와 농과원 정인홍 박사는 배추좀나방 · 비래애벌레 약제 저항성 발생을 학술발표로 보고했다. Dinotefuran 농약은 감수성 계통대비 약 5~70배의 저항성, Imidacloprid에 대한 애벌레 저항성이 타 약제에 비해 0.9~106배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배추좀나방 저항성 보고는 많았으나, 중국에서 약제 저항성 형질을 획득한 비래집단이 유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농진청,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정밀 진단 키트 개발**

농진청은 인삼 재배지토양에서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의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키트

▲ 진단키트 사용법

**◎종자업체 농우에 법인세 200억 추징 폭탄...“즉각 철회를”**

국세청이 종자업체의 해외 채종사업을 '농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 업계가 줄줄이 법인세 '폭탄'을 맞게 됐다.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자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농우바이오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년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 37억여원을 11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 : 24~27일 부산 벅스코서 개최**  
 부산 MBC가 주최하는 '2016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가 오는 24~27일에 걸쳐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발맞춰, 박람회에선 전국 각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농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전통식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다.

**◎ 황주홍·이개호·김현권·이만희 '우수 국감의원'**



한농연이 지난 16일 '201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을 개최 이개호, 황주홍, 김현권, 이만희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 2016 천안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성료**

ICT·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자재 400여개 업체 국내외 10여만명 참관 -한친농 특별관에 부스설치,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 책자 배부 등 홍보-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특별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자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참관객들에게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금번 행사를 통해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안전사용책자 등 정보를 제공했다

**◎한친농, 11월28일 베트남농업협회와 수출 등 상호협력 미팅**

한친농은 베트남 디지털농업협회와 친환경농자재 수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들 20인중 5인을 초청 11월28일 B2B 미팅을 가졌다. 베트남 미팅 참가자들의 관심분야는 첨단농자재/친환경영양제 등이었다. 이들 20인 협회임원은 베트남 농업관련분야 CEO 들이다. 향후 협력을 강화기로 했다.

**◎농민 월급제 시행등 농식품부소관 법률안 3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농민 월급제 관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 특별법안' 등 농해수위소관 법안 31건을 통과시켰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정식 명칭인 농민 월급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는 제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법률명	주요내용 및 시행일	담당부서
1	관련법(지방세법)에서 삭제된 인용조항 삭제(제121조 제2항) ○시행일 : 공포일	농촌정책과 (044-201-1520)
2	농어촌회계법 ○농특회계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전출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1324)
3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 노력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보험사업자의 가입촉진 계획수립, 재해보험 대상품목 과 보상재해 범위 확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6	도시농업법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정비)○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7)
7	식물신품증보호법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제 규정 신설 ○시행일 : 공포일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9	초지법 ○초지조성 투자비용 산출 및 지급 기준 영구시설물 설치 규모 제한 등의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일	친환경축산팀 (044-201-2382)
10	한국마사회법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시행일 : 공포일	축산정책과 (044-201-2324)
11	농어업인삶의질법 ○지자체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근거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촌정책과 (044-201-1520)
12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의 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검역정책과 (044-201-2072)
13	축산법 ○국내 염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 하도록 축산법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1년	축산경영과 (044-201-2338)
14	식품산업진흥법 ○'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수출진흥과 (044-201-2179)
15	식생활교육지원법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 절차 법률에 직접 규정 ○시행일 : 공포일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2)
16	원산지표시법 ①상습범을 재범자로 하여 기준 명확화 및 형량벌금 하한제(3년 이내 →5년 이내,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도입, ②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③대외무역법과의 적용관계 명확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17	농안법 ①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명확화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수급안정기금 조성 근거 마련 ③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행일 : 공포일	유통정책과 (044-201-2221)
18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8)